#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 : 형성과 적응

허 문 영*

◁目 次▷

Ⅰ. 서 론
Ⅱ. 북한 대외정책 이념의 형성과정
Ⅲ. 북한 대외정책 이념의 적응과정
Ⅳ. 결 론

## Ⅰ. 서 론

북한은 대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도이념을 설정하는 것이 승리와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1] 그래서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친선·평화'를 항일혁명 투쟁시기부터 '대외정책[2]'의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

2) 북한은 대외정책을 "대외관계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는 근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 방침"으로 규정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외교를 "나라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 또는 그러한 활동"과 더불어 "속심은 내놓지않고 겉발림으로 듣기 좋게 말하면서 원칙과 어그러지는 일을 은근히 흥정하려고 드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였다.

기본리념'으로 설정하였음과 이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들과 대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온 것으로 주장한다.[3] 그러나 북한학자 및 북한당국의 이같은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자주·친선·평화를 공식적 차원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최초 언급한 시기가 1980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제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또한 과장·미화되었거나, 왜곡·무시됨으로써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주의 국가의 국내·국제정치 행위패턴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3]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공식이데올로기가 대외정책의 목표를 규정짓고, 정치적 행위의 수단을 선택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공식이데올로기와 대외정책 패턴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는 정책변화에 앞서 이데올로기의 재조정작업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데올로기 구조에서의 강조점 변화는 곧 대외정책의 변화에 반영된다는 것이다.[5] 그런데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으며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와 방향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외정책 이념에 대한 연구는 별로 눈에 띄지를 않는다.

---

「조선말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896, p. 1765. 한편 이 글에서는 대외정책 또는 외교정책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국제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는 타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이고 공식적인 행위지침"으로 사용하였다.

3) 북한은 김일성 교시에 의하여 "자주·친선·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미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이 이념에는 자주적 입장과 반제혁명적 입장, 철저한 국제주의적 입장이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 pp. 3~16.

4) Walter Carlsnaes, Ideology and Foreign Policy (New York ; Basil Blackwell, 1986) ; Steven I. Levine, "Perception & Ideology in Chinese Foreign Policy," in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New York ;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p. 30~46.

5) 이상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외교정책," 「북한과 오늘의 세계」 (서울 : 법문사, 1986), pp. 34~44.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외교의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적 변화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대외정책 이념의 형성과정과 변화 상황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북한은 대외정책 이념을 어떠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해 왔는가? 둘째, 북한은 대외정책 이념에 어떠한 내용을 함의해 왔는가? 셋째, 북한은 대외정책 이념의 순서를 왜 바꾸어 제시했는가? 예컨대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자주·친선·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였는데,[6] 왜 1988년 9월 이후부터는 평화를 친선보다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자주·평화·친선'으로 정식화하고 있는 것인가?[7] 넷째, 북한은 탈냉전기 김정일 정권하에서 대외정책 이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한편, 북한 대외정책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예컨대 북한 당국의 경우 북한외교의 변천과정을 ① 민주건설시기 공화국의 대외관계, ②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대외관계, ③ 사회주의기초 건설시기 공화국의 대외관계, ④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공화국의 대외관계(1960년대), ⑤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시기 대외관계(1970~80년대) 등 크게 5기로 구분한다.[8] 한국의 통일원은 북한외교 변천과정을 ①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수립~1950년대 초) ② 다변외교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③ 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 ④ 대서방외교 강화기(1980년대 이후) 등 크게 4시기로 구분한다.[9] 그외 권역별 정책변화와 연관지워 구분한 방법[10] 또는 외교체제의 창설 몰락과 연관지워 구분

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1」(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81), pp. 28~76.
7)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한 보고, 1988. 9. 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89), p. 32.
8) 박태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박태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9)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 통일원, 1992), pp. 397~401.
10) 박창희, "북한외교정책전개상의 특징,"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서울 : 한국정치학회, 1989), pp. 620~626.

한 방법[11] 그리고 외교대상·정책목표·정책노선의 변화와 연관지워 구분한 방법[12]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같은 기존 연구에 근거하기 보다, 대외정책 이념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과정을 새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대상문건으로서는 북한외교의 실질적 최고정책결정자인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문건과 형식적 최고정책결정자인 최고인민회의 문건 그리고 관리·집행당국인 국제부 및 외교부의 문건을 활용하고자 한다. 김일성 부자의 경우에는 매 당대회에서의 총화보고 및 주요 연설문[13]을, 최고인민회의의 경우에는 정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의사항[14]을, 외교부 국제부의 경우에는 주요 관리의 기명 논설[15]과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

11)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국력추세비교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586~638. ① 1945~53년 : 외교체제 창설기 ② 1954~60년 : 외교체제 정비기 ③ 1961~71년 : 자주노선 천명기 ④ 1972~80년 : 외교적 도약기 ⑤ 1981~90년 : 외교적 침체기 ⑥ 1991년 이후 : 외교적 몰락기.

12) 필자는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과정을 냉전기와 전환기로 먼저 구분하였다. 그리고 냉전기를 ① 대소련 추종기(정권수립 이후~한국전쟁 휴전기) ② 다변외교 모색기(한국전쟁 이후~1960년대 초반) ③ 자주외교 선포기(1960년대 중반~1960년대 후반) ④ 자주적 다변외교 추구기(1970년대) ⑤ (체제발전을 위한) 제한적 개방외교 모색기(1980년대) 등 5시기로 세분하였고, 전환기는 (체제유지를 위한) 제한적 개방외교 추진기 또는 전방위외교 추진기(1988년 이후 현재까지)로 규정하였다.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변천사," 「한국외교사 II」 (서울 : 집문당, 1995), pp. 481~530.

13) 「조선중앙년감」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 김일성,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일성 저작집」 ; 「김정일선집」.

14) 「조선중앙년감」, 각년판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15) 「국제생활」, 각 월간판 ; 「근로자」, 각 월간판.

## II. 북한 대외정책 이념의 형성과정

### 1. 反帝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강조(1948~54년)

북한은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 1회의에서 내각수상 김일성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통해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북한은 이 정강을 통해 대외정책 이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맹아인 공산국가들과의 친선협조 관계형성과 자주이념의 맹아인 반제국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일곱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는 우리민족이 전세계 자유애호민족들의 대열에서 동등한 한성원으로 되며 또한 우리 민족의 평등적지위와 자유를 존중하는 여러 자유애호 민주국가와 민족들과의 견실한 친선을 맺도록 도모하게 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일본을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로 재생시키는것은 위선 우리민족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임으로 일본을 다시 제국주의침략국가로 재생시킬려고 시도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을 전부 다 우리민족의 원수로 인정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일본을 비군국화하며 민주화함에 대한 포츠담회담의 결정을 실천할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16]

첫째, 한국전쟁 이전기에 북한은 공산국가들(자유애호국가 또는 국제민주진영)과의 관계 발전 및 반제국주의(반일본-반미국) 지향의 대외정책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공산국가들과의 국교수립을 통하여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코자 하였으며,[17] 반제국주의를 통하여 주한미군

1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강," 「조선중앙년감 1950」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18.

철수와 '조선혁명의 완수(한반도공산화 통일)'를 이루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한국전쟁 기간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18]를 대외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이른바 '진정한 애국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부르죠아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질서를 이른바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간의 대립투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의 국제관계를 "판매시장과 원료원천을 위한 략탈자들간의 맹렬한 투쟁, 약소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침략과 정복,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국가들의 략탈"로 특징지웠다. 반면에 미래 공산주의 세계의 국제관계는 '호상존중과 형제적협조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북한은 간주하였다.[19]

이 시기 북한이 반제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보다 강조했던 이유는 김일성 정권이 소련사회주의의 후원하에 탄생하였기 때문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진영외교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전쟁 직전에는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와 전쟁물자를 확보할 수

17) "우리는 모든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외교적, 경제문화적 협조관계를 맺고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신을 현저히 높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쏘련을 비롯하여 체스꼬스로벤스꼬, 뽈스까, 로므니아, 웽그리아, 벌가리아, 몽골인민공화국 기타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국교를 맺었으며 국제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무대에 떳떳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5권, p. 256.

18)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밑에 로동계급이 자본주의 제도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국제적으로 단결하고 서로 돕는 사상," 「정치용어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630 ;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70 ;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로동계급이 서로 지지성원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사상과 원칙,"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581.

19) 김일성,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1952. 4. 25)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p. 25~31.

있었고, 한국전쟁기에는 중국으로부터 군대 파병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한국전쟁 이후기에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20]

## 2. 「자주·친선·평화」의 맹아 대두(1955~65년)

북한은 1955년 2월 외무상 남일의 성명을 통하여 소련추종의 진영외교를 탈피하고, 평화공존적 다변외교로의 전환을 최초로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와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을 통하여 평화공존론과 다변외교 정책을 거듭 제시하였다.

>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선 호상 리익에 부합되는 무역관계와 문화적 련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 일본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상술한바 제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조·일 양국 인민의 절실한 리해관계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극동의 평화 유지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1]

### 가. "사상사업에서의 주체" 제기와 「자주노선」 모색

첫째, 북한은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의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22] 물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한 것의 기원은 1926년 10월

---

20)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회의(1953. 12. 20)에서의 보고를 통하여 소련,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지와 원조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는 한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21) 「조선중앙년감 1956」, p. 16.

22)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 12. 28) 「김일성저작선집 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560~585.

27일 'ㅌ·ㄷ제국주의동맹' 결성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3] 그러나 이 주장은 객관적·공식적 근거자료보다 김일성의 증언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24] 북한의 공식 문건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서는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의 당선전선동일꾼들 앞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북한은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김일성은 이 연설을 통하여 당의 이데올로기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유감이지만 우리의 선전사업은 많은 점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체가 없는 것이 사상사업의 가장 주요한 결함입니다.…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전쟁시기에 군대 내에서는 정치사업의 방법문제를 가지고 허가이, 김재욱, 박일우가 쓸데없이 서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쏘련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쏘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25]

한편, 북한이 '주체'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한국전쟁과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 내부세력의 도전에 처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현실적 한계성과 '주체노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과 소련 정치지도층의 내분 및 1956

23) 「근로자」, 제6호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4.

24) 1969년 12월 10일 「조국통일」지에 의하면 김일성이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한 것이 1927년 여름이므로, 오늘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호민, "북한의 대외관계 이데올로기,"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 대왕사, 1987), p. 22.

25)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1」, pp. 560~569.

년 2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격하운동과 평화공존정책 추진에 따른 북한의 대소신뢰 약화,[26]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회의를 통한 제3세계의 국제무대 등장과 북한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지 증대, 한국전쟁 중 남로당 숙청과 1956년 8월 연안파 및 소련파 숙청 그리고 1958년 1월 기타 종파주의자 제거, 제1차 5개년계획(1956~60년)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외부경제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의 필요 등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직면하여 북한은 김일성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27]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다변외교와 주체노선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북한은 1962년 10월 23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의 김일성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간의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주장함으로써 자주노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관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두다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간에 서로 존중하며 지지합니다. 이 나라들 사이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그 나라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28]

이후 북한은 「로동신문」 사설[29]과 김일성의 각종 연설[30]을 통하여 자주

26) 김일성 당 중앙위원장은 제3차 조선로동당 전당대회(1956. 4. 23~29)에서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1956. 2)에서 채택된 '스탈린 격하와 평화공존 노선' 중 후자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총결보고'를 제시하였다.

27) "사대주의-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시기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후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1986. 5. 31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조선중앙년감 1987」, p. 34.

28) 「조선중앙년감 1963」, pp. 38~39 ;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 1175.

노선을 거듭 표명하였다. 예컨대 "중국공산당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에는 대·소가 있으나, 당에는 고·저가 있을 수 없으며 어느 당도 형제당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거나 형제당을 비방해서도 안된다"는 강경한 논조의 대소비난을 가함으로써 북한은 친중노선을 분명히 하였다.[31] 또한 북한은 1963년 10월 28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 진영을 수호하자"를 통하여 소련의 중국고립화 정책과 경제 군사원조를 통한 대북 내정간섭 정책을 비난하며 중지를 요구하였다.

북한이 자주노선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모색한 이유는 중·소분쟁의 심화에 따른 사회주의진영의 분열과 한·일국교정상화 및 베트남전쟁의 확전이라는 지역체계의 변화로 인해 안보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자, 이에 대한 반응적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소분쟁의 심화는 북한의 대외노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55년부터 1966년 8월 사이에 북한은 종래의 친소노선[32]에서 중립노선[33]으로, 중립노선에서 친중공노선[34]으로, 친중공노선에서 자주노선으로의 전환[35] 등 크게 4차례 변화하였다.[36] 그리고 이 와중에 북한은 자주적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

31) 「조선중앙년감 1964」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4), pp. 115~131.

32) 북한은 1959년 11월 소련공산당 제21차대회 때까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친소노선을 명시하고 있었다.

33) 1960년 4월 16일 중국공산당이 기관지 「紅旗」의 논문 '레닌주의 만세'를 통하여 소련의 입장을 비판하게 됨에 따라 중·소분쟁이 국제공산주의 운동내의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악화되었다. 양호민, "북한의 대외관계 이데올로기," p. 26.

34) 1962년 쿠바사태 및 중·인 국경분쟁에서 소련이 취한 투항주의적 행태에 대한 북한의 불신 등으로 인해 북한은 친중적 입장을 취하였다. 허문영, 「탈냉전기 북한의 대중국·러시아관계」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2~13.

35) 1966년 5월 16일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이후 당시 홍위병들이 김일성에 대하여 대대적인 비난을 가하였고,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 능력 또한 한계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친중노선을 벗어나게 되었다.

36) 양호민, "북한의 대외관계 이데올로기," p. 26.

나. 다변외교 모색

첫째, 북한은 1955년 2월 25일 "대일관계에 관한 외무상의 성명"을 통해 대소련일변도의 진영외교 탈피와 다변외교로의 전환을 공식 발표하였다. 당시 외무상 남일은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음과 더불어 "우선 호상 리익에 부합되는 무역관계와 문화적 련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였다.

둘째, 북한은 다변외교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는 바, 제3차 당대회(1956. 4)와 제4차 당대회(1961. 9)에서의 김일성 '사업 총화보고'를 통해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였다.[37]

> 우리는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로운 일입니다.[38]

다. 평화공존 정책 채택

첫째, 북한은 1956년 2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 이후 후르시초프 정권의 영향을 받아 전쟁불가피론을 수정하고, 평화공존 정책을

37) "남일 외무상 보고,"(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회의, 1955. 3. 9~11)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집, pp. 719~726 ; "김일성 당 중앙위원장의 사업총결보고,"(제3차 조선로동당 전당대회, 1956. 4. 23~29)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p. 293 ; "김일성의 사업총화보고,"(제4차 조선로동당 전당대회, 1961. 9. 11~18)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 pp. 91~101 ; "김일성 시정연설,"(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 1962. 10. 23)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p. 1171~1177.

38)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 117.

수용하였다. 김일성은 1956년 조선로동당 제3차 전당대회와 1961년 제4차 전당대회를 통하여 평화공존 정책을 북한의 대외정책 주요원칙으로 내세웠다.

> 흐루쇼브 동지가 성명한 바와 같이 오늘 평화력량은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물질적 수단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새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동시에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 존중과 평등권에 립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련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39]
>
> 국제무대에서 력량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으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 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마련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평화와 사회주의의 강한 력량이 제국주의 전쟁세력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때는 지났습니다.[40]

둘째, 그러나 북한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과의 연대-친선 강화와 민족해방투쟁의 지지를 약화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서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이 나라들과의 호상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왔습니다.…국제생활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원칙의 하나는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니다.…우리 당은 어느때 어떠한 환경에서나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위하여 자기

39)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1집 (서울 : 국토통일원, 1979), p. 293.
40)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2집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p. 93.

의 모든 힘을 다하여 왔으며 또 다하고 있습니다.[41]

북한이 이 기간 평화공존 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상황 가운데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반둥회의'에서 평화5원칙이 발표되며,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존 정책을 거론함에 따라 동서공존적 분위기가 팽배하자, 이에 편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또한 평화공존이 북한중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42]

### 3. 「자주·친선」이념의 정립(1966~79년)

이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1967. 12. 16)에서 발표한 '정부정강'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자주·친선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여덟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열째,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와 평등한 립장에서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도모할것을 시종일관 천명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것입니다.[43]

---

41) 위의 책.

42)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외부적 요인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5년 내지 10년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성공한다면 쏘련은 물론이요, 6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대해질 것이며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1」, p. 575.

### 가. 자주와 반지배주의

첫째, 1966년 8월 12일「로동신문」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를 통하여 북한이 '자주성'을 대외관계의 주요원칙으로 천명함에 따라, 자주노선은 본격적 정립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북한은 이 사설에서 중국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당관계에서 북한의 주체적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월남전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와 교조주의를 비판하였다. 북한은 또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친소적 중립입장도 변호하였다.

> 국제관계에서도 우리 당은 자주적으로 활동하였다.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우리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 정세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나갔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다.[44]

둘째,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립된 자주노선[45]은 1966년 10월 당 대표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동 회의에서 김일성은 보고문을 통하여 '현대수정주의',[46] '교조주의',[47] '좌우경기회주의',[48] 그리고 '대국주

43)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1967. 12. 16)「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p. 197~203.

44)「로동신문」, 1966. 8. 12.

45) 북한은 자주노선을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견지하며 맑스-레닌주의원칙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견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관철해나가는 당의 로선"으로 설명한다.「정치용어사전」, p. 430.

46) "현대 수정주의는 〈정세의 변화〉와 〈창조적 발전〉이라는 구실 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고 그 혁명적 진수를 거세합니다. 그것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합니다. 현대수정주의는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사회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의'[49] 등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이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공산당들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호상관계를 맺어야 할 것임을 김일성은 주장하였다.[50]

> 공산당 및 로동당들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당도 국제공산주의 운동내에서 특권적 지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는 각국 당들의 활동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3국제당이 해산된 후에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어떠한 〈중앙〉이나 〈중심〉도 없습니다.…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은 맑스-레닌주의이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밖에 다른 지도사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우리 당의 자주적 립장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밀접히 결합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고립주의나 민족주의를 철저히 반대합니다.[51]

---

각방으로 방해합니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69. 이 보고문 전문은 「조선중앙년감 1966-67」, pp. 100~130.

47) "교조주의란 별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처한 구체적 현실조건을 타산하지 않고 일반명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태도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남의 것을 통채로 삼킨다는 뜻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 p. 397.

48) 김일성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로동운동에 나타난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사상'으로 규정하고, 현대수정주의를 우경기회주의로, 교조주의를 좌경기회주의로 비판하였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pp. 168~169.

49)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다른 당들에 자기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사이에서는 다른 나라 당들이 자기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도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pp. 182~183.

50)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pp. 152~188.

셋째, 이같은 북한의 자주노선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정부정강[52]과 1970년에 출간된 「정치용어사전」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53] 항목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 16조로 채택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54]

북한이 이같이 자주노선을 결정적으로 정립케 된 데에는 김일성 유일체제의 형성 및 군사력 강화와 북한·중국간의 갈등 심화[55]가 그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경제 병진정책」과 1964년 2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그리고 1967년 유일사상체계 확립[56]에 기초하여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한·중국 갈

51)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pp. 180~188.
52)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pp. 76~107 ; 「조선중앙년감 1968」, pp. 1~29.
53) 「정치용어사전」, p. 531.
54)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6조," 「북한개요 91」 (서울 : 통일원, 1991), p. 484.
5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p. 82~86 ; 박길용, 「김일성 외교비사」 (서울 : 중앙일보사, 1995), pp. 126~131.
56)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로동신문」, 1968. 5. 20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134에서 재인용.

등이 새로운 소련지도부에 대한 인식 및 월남전에 대한 대응태세의 차이로 촉발되었고, 문화대혁명으로 심화되자,[57]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소 양국으로부터 받아온 내정간섭에 대한 반발로 자주노선 정립을 적극 추진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1978년에 들어와 북한의 「대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지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였다. 1978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30돐 기념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를 통하여 북한은 제국주의에 대한 기왕의 비판과 더불어 지배주의에 대한 비판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조종과 음모에 의하여…심지어 형제나라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며 싸우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 조류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입니다.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지배주의는 큰 나라에도 있고 비교적 작은 나라에도 있으며 자본주의나라에도 있고 그밖의 나라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라의 크기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는 나라는 다 지배주의세력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든지, 은폐된 방법으로든지 남을 지배하는 것은 다 지배주의입니다."[58]

---

57) 당시 북한은 새로운 소련지도부의 정책을 흐루시초프의 정책과 구별하여 인식하였으나, 중국은 '후르시초프없는 후르시초프주의'로 간주하였다. 북한은 또한 월남전에 관해 전세계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소련의 '수정주의'와 연결하여 거부하였다. 이같은 북·중갈등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는 바, 1967년 1월부터 중국 홍위병은 신문·벽보·삐라 등을 통해 김일성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 정치적 불안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허위선전을 유포하였다. 이에 양국관계는 현지 대사를 소환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다.

58)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78. 9. 9)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p. 426~427.

김일성이 지배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 비판한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비동맹운동의 허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공산통일 월남은 1978년 6월 코메콘에 가입하고, 8월에 소·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소련의 준군사동맹국이 되었다. 그리고 월남은 1979년 1월 중국후견하에 있는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친월남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에 중국은 2월에 월남을 침공하였으며, 소련은 12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친소련정권을 수립하였다. 사회주의국가들(중국·월남·캄보디아) 사이에서, 비동맹국가들(월남·캄보디아) 사이에서, 사회주의 대국(소련)과 비동맹국가(아프가니스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비동맹운동의 허구가 입증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중·소분쟁의 와중에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처럼 침공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반지배주의를 천명케 된 것으로 보인다.[59]

나. 친선과 비동맹주의

첫째, 북한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정강에서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도모"할 것을 목표로 하는 다변화 대외정책을 천명하였다.[60] 이러한 북한외교의 다변화 논리는 1966년 10월에 공식선언한 자주노선과 결합하여 자주적 다변외교 노선으로 발전하였다. 즉 북한은 자주노선을 토대로 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61] 및 반

59) 김일성이 소련의 대중국 비판용어인 '패권주의'나 중국의 대소련 비판용어인 '사회제국주의'를 원용하지 않은 이유는 중·소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김일성은 지배주의에 대한 비판이 특정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일성,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과 한 담화,"(1978. 10. 21)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위하여」, p. 435.

60) "우리는…우리나라와 평등한 립장에서 국가관계를 맺을 것을 원하는 모든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도모할 것을 시종일관 천명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입니다." 「조선중앙년감 1968」, p. 26.

61) 이 시기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본요구를 ①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것 ②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것 ③ 자본주의나라 로

제·반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 한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자주적 다변외교 노선은 1971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여,[62]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천명되었으며,[63] 1972년 12월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명문화되었다.[64] 이러한 외교노선은 1973년 12월 20일 발간된 「정치사전」의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항에 반복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뿔럭불가담 나라'들로 일컬어지는 비동맹국가들과의 친선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초청 및 방문외교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65]

> 대외정책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아세아, 아

---

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1950대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사전」, pp. 1170~1171.

62) 김일성,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72」, pp. 279~231 :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842~843.

63)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3집, pp. 507~508 ; 「조선중앙년감 1973」, pp. 28~29.

64)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1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 통일원, 1990), p. 485.

65) 북한은 1971~75년 사이에 아시아에서 190여개, 아프리카에서 250여개, 라틴 아메리카에서 90여개, 모두 530여개국의 대표단을 초청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pp. 106~107.

> 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더 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66]

이 시기 북한이 친선노선을 강화하여 자주적 다변외교와 비동맹외교를 적극 추진한 이유는 데탕트의 국제환경[67] 가운데 새로운 경제발전전략[68]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남한과의 외교적·경제적 경쟁에서의 열세[69]를 탈피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4. 「자주·친선·평화」이념의 체계적 정립(1980~87년)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사업총화 보고를 통하여「자주·친선·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공식 천명하였다.[70] 북한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의 김

66)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pp. 507~508 ;「조선중앙년감 1973」, pp. 28~29.

67) 1969년 미·소 데탕트, 1971년 9월 중국의 UN 가입, 1972년 닉슨 미대통령의 중국 방문,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

68) 6개년계획(1971~77년).

69) 1970년 말 현재 남북한 수교국 수는 각각 83 : 36이었고,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도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70) 북한은 국가목표를 '조선혁명의 완성'에 두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 수행을 당면목적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최종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외정책의 목적을 '조선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마련'으로 규정하고, 이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외정책 이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안용세,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사회과학」, 1981년 5호(누계 48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9), p. 56.

일성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를 거듭 강조하였다.

>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입니다.[71]
>
> 우리 공화국 정부가 대외관계 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기본 이념은 자주·친선·평화입니다. 자주·친선·평화의 이념은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72]

### 가. 자 주

자주의 내용으로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은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자주성을 가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이익'을 다시 말해 '우리 혁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외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 기초해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이렇게 자주성을 확보해야만이 대외활동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창발성을 발휘하며, 좌·우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것[73]으로 보았다.

둘째, 북한은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방안으로서 '신흥세력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과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지켜야 할

71) 「조선중앙년감 1981」, pp. 65~66.

72) 김일성,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4집, p. 797.

73) 안용세,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p. 56.

것[74]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철저히 폭로 규탄해야 할 것임을 북한은 주장하였다.

나. 친 선[75]

북한은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첫째, 북한은 대상국가의 성격에 따라 친선관계 형성 방법을 달리 제시하였다. 예컨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을 강화하며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76] 쁠럭 불가담 나라 즉 제3세계 국가들과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 것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인 나라에 한정하여[77]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여 '외래 침략자' 축출 및 자주적인 새아세아 건설을 명분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세아 나라들과의 선

74)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침략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제국주의에 있어서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 본성이 아니라 침략수법입니다.…물론 사회주의 나라들과 쁠럭불가담 나라들이 제국주의 나라들과 국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원칙적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여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근본 리익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반제적 립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중앙년감 1991」, p. 64.

75) 북한은 친선을 "제국주의반동세력을 반대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들과 인민들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무기"로 평가하였다. 고성순, "자주, 친선, 평화는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의 기본리념," 「근로자」, 제538호 (1987. 2), p. 94.

76) 북한은 사회주의나라들이 '내부 의견상이'로 인하여 단합되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 반대, 식민지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 지지, 내정불간섭과 호상존중 그리고 평등 호혜의 원칙하에 단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백과전서(2)」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362.

77) 김일성은 동 보고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하에 미국과 좋게 지낼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1」, p. 66.

린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임도 언급하였다.

둘째, 북한은 자주적 새세계 건설을 위한 방법으로서 '쁠럭불가담 운동 확대 발전'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북한은 그 내용으로서 모든 쁠럭불가담 나라들이 쁠럭불가담 운동의 근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임과 완전한 평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지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과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이간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반목 질시하거나 싸우지 말 것임과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 것[78]임과 국제정치관계분야에서도 열강의 특권과 전횡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79]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북한은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회주의 역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의견 상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 다. 평 화

평화와 관련하여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모든 군사 쁠럭의 해체와 침략적 군사기지의 철폐 및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이 군사 쁠럭에 기초한 세력균형에 의해 유지될 수 없음과 선 자본주의진영 군사 쁠럭 해체, 후 사회주의 군사 쁠럭 해체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조선혁명의 완수'를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북한은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과 확대를 주장하였다. 특히 한반

78) 북한은 공정한 금융통화제도의 수립, 불공평 무역관계와 편파적 분업체계의 개편 그리고 원료자원국의 단결을 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1」, p. 65.

79) 북한은 그 방법으로서 국제기구의 성격 전환을 주장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1」, p. 65.

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창설할 것과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할 것과 모든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1986년 2월 1일부터 "공화국 북반부의 전영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 것과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도 군사연습 중지"를 선포할 것을 제의하였다.[80]

셋째, 북한은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당사자들이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과 북한은 일방에 대한 지지 및 반대를 천명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북한은 "평화는 구걸하여서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1]

넷째, 북한은 자본주의 나라 노동계급과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북한은 팔레스타인, 중근동, 남부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함을 밝혔다.

## Ⅲ. 북한 대외정책 이념의 적응과정

### 1. 「자주·평화·친선」 수정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삭제 (1988~94년)

가. 대외정책 이념의 순서 및 내용 변화

북한은 1988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을 통해 대외정책 이념의 우선순위를 '자주-친선-평화'에서 '자주-평

80) "북한 외교부 성명,"(1986. 1. 11) 「북한군사문제 제의자료집」 (서울 : 평화연구원, 1989), p. 828.

81) 정동욱,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근로자」, 제526호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2), p. 92.

화-친선'의 순으로 바꿔 제시하였다.[82]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의 김일성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를 거듭 천명하였다.[83] 이때 북한이 천명한 '자주·평화·친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는 모든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입장이자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관계의 기초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남이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자주권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은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인종주의'를 반대할 것도 천명하였다.

둘째, 평화는 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규정되었다. 북한은 현시기 평화와 관련된 중요 문제로서 "핵군비경쟁 중지, 군축 실현, 침략군대와 침략군사기지 철수, 비핵지대·평화지대 창설"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해 세계평화애호역량과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사회주의진영의 붕괴를 '제국주의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였다.

셋째, 친선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인민들 사이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개별 나라의 자주성 확보와 인류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담보로 규정되었다. 북한은 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나라와의 단결을 긴밀히 하고, 쁠럭불가담 운동을 강화시키며, 국가관계가 없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 협조와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며 민간간의 친선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남협조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

82)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1988. 9. 8) 「국제생활」, 1988. 10(누계 33호), pp. 3~22.

83)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0. 5. 24) 「국제생활」, 1990. 6(누계53호), pp. 3~18.

## 나. 공존과 평화

1988년은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에 있어 주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해였다. 첫째, 북한은 대남정책에 있어 '공존'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하여 '남북공존'의 필요성을 최초로 북한은 표명하였다.[84] 북한은 동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을 통해 공존의 원칙을 거듭 천명하였다.[85] 1990년 9월 동독이 서독에로 흡수통일되자,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는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86]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강성산 총리의 대독으로 발표된 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1항에서 최종적으로 천명되었다.[87]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 이같은 북한의 안보위기감은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로 말미암아 일단 해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또한 북한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평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9월 8일 김일성 연설을 통해 대외정책 이념의 우선순위를 '자주-친선-평화'에서 '자주-평화-친선'의 순으로 바꿔 제시하였다. 북한은 또

84) 김일성은 "조국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앞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도 아니며…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9」, pp. 1~7.

85)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p. 20.

86) "최근 다른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일성, "신년사," 「조선중앙년감 1992」, p. 6.

87)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이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뿔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조선중앙년감 1994」, p. 9.

한 동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정무원의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88] 북한은 '평화보장 4원칙'[89]과 '포괄적 긴장완화방안'[90]을 제의하였는 바, 평화 선전공세를 통하여 체제유지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그해 12월 북경에서 미국의 참사관급 외교관과 접촉을 시작하였고, 1990년 9월 북한 로동당은 일본 자민당 및 사회당과 함께 3당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대서방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북한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1. 9. 17)을 계기로 유엔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청산되어야 함도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 실천내용으로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유엔군사령부 해체·대미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등을 북한은 다시 제시하였다.[91]

>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관계가 없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 협조와 문화적 교류

88) 이 제안은 1988년 10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내용(남북정상회담의 실현, 동북아평화협의회 구성,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에 대한 북한의 대응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89) ① 통일지향(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여야 함) ② 외군철수(주한미군) ③ 남·북군축 ④ 당사자협상(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함 : 미국과 남·북한).

90) 한반도의 평화실현 방안 : ① 미군무력(핵무기 및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철수 ② 남북무력(병력·군사장비·군사조직)의 단계적 축감 ③ 미군무력의 철수와 남북무력의 감축에 대한 통보와 검증 ④ 북한·미국·남한 사이의 3자회담.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 : ① 정치적 대결상태완화(상호비방·중상 중지, 정치행사중지 및 법제도 철폐, 합작·교류실현) ②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대규모군사연습 중지, 군사행동중지,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시) ③ 남북 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진행. 「北韓軍事問題 提議資料集(1948~1988)」 (서울 : 平和硏究院, 1989), pp. 921~925.

91)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기자회견," (1991. 9. 18) 「조선일보」, 1991. 9. 19 ; "연형묵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 「한국일보」, 1991. 10. 3 ;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의 제4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1993. 10. 5) 「북한동향」 (서울 : 통일원, 1993. 10), p. 54.

> 를 발전시키며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자주, 평화, 친선은 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으로, 생활적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자주성을 옹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 책동을 짓부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92]

넷째, 북한은 냉전종식을 계기로 대미 직접협상의 명분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김일성은 1992년 4월 12일 Washington Times지 기자와의 담화에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조미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랭전의 종식은…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에서 국제사회의 민주화, 자주화 과정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다같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에서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력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93]

다. 맑스-레닌주의 삭제와 민족주의 강조

첫째, 북한은 1992년 개정헌법에서 맑스-레닌주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을 수정하였다.[94] 구헌법에서는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인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것으로 규정되고(제4조),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으로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의 단결"(제16조)함에 두었다. 그런데 신헌법에서

92)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pp. 32~34.
93) 「로동신문」, 1992. 4. 18.
94) 사회주의 헌법 제 17조.

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고 규정하였으며, 대외정책의 기본이념과 대외활동원칙으로 '자주·평화·친선'을 제시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95]

이것은 북한이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김일성-김정일 부자중심의 특수적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패배주의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미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6차 대회를 기점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에서 삭제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의 지도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북한 당국의 입장은 1986년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1989년 '조선민족제일주의론' 그리고 1991년 '우리식사회주의론'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와 맑스-레닌주의 체제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제거하고, 이에 따라 대외정책 원칙에 있어서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는 대신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3년 4월 7일 제9기 제5차 최고인민

96) 「북한개요 95」 (서울 : 통일원, 1995), p. 537.

회의를 통해 김일성이 작성했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하였고, 동년 10월 2일 「단군릉 발굴 보고」를 통해 단군의 실재성을 주장하였고, 동년 12월 9일 제9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을 강조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논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수성과 대남 정통성 경쟁의 우위(또는 민족 동일체 의식)를 확보함으로써 김일성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방책으로 분석된다.

## 2. 「자주·평화·친선」 지속 및 평화 강조(1994~현재)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에도 「자주·평화·친선」의 기존 대외정책 이념을 지속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였다.[96] 북한은 이같은 입장을 1995년 1월 1일 당보 「로동신문」, 군보 「조선인민군」, 청년보 「로동청년」의 공동사설에서 거듭 밝혔다.[97] 북한이 기존 대외정책 이념을 지속하는 것은 사망한 김일성의 북한주민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유훈통치」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 김일성동지가 생전에 밝히신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대외정책적 이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새해에도 자주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96) 김영남 추도사(김일성추도대회 1994. 7. 20) ; 홍성남 보고(국가수립 46주년 기념대회 1994. 9. 9) ; 김기남 추모사(김일성사망 1백일 추모회 1994. 10. 16).

97) 이같은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은 양형섭 추모사(김일성 사망 1주기 중앙추모대회, 1995. 7. 7) ; 박성철 경축보고(국가수립 4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1995. 9. 8) 등을 통해 반복 표명되었다.

> 평등과 정의,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교란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군축 특히 핵군축을 실현하여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살펴는 인류의 념원을 실현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98]

### 가. 자주 : 민주적 국제질서 수립과 유엔 개혁

첫째, 북한은 1996년 1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탈냉전기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적 정세인식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소요와 불안정, 국제분쟁이 일어났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은"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자주적 입장과 원칙에서 대외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주권이 침해됨과 더불어 '지배주의자'들의 예속물로 전락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소련의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 견해[99]를 표명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강조하자,[100] 북한은 자주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101]

---

98) 「로동신문」, 1995. 1. 1.

99)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이요, 〈전인류적 가치〉요 하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나와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를 계급적으로 변질시켰다.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떠난 〈새로운 사고방식〉, 〈전인류적 가치〉란 다름아닌 부르죠아적 사고방식, 부르죠아적 가치관이다."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1995. 6. 21.

100)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거세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제국주의자들의 비위에 맞게 왜곡변질시켰으며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떠벌이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여나섰습니다."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로동신문」, 1995. 12. 25.

101) 「로동신문」, 1995. 8. 26 ; 8. 31 ; 1996. 2. 9 ; 3. 17 ; 3. 27.

셋째, 북한은 자주적, 민주적인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수립을 위해 국가와 민족들의 대소, 강약,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주권과 영토완정,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102] 또한 국제경제부문에서 평등·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국제금융 및 통화체계, 불평등한 무역관계, 편파적인 국제분업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며, 발전도상국가들의 대외채무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103]

넷째, 북한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의 개념과 원칙을 설정하기 위해 유엔의 민주화 또는 개혁과 더불어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104]

나. 평화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와 '평화옹호운동' 제창

첫째, 북한은 1994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주장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고,[105] 정전협정의 사문화·무실화 전략을 추진하였다.[106]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이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이같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전조선혁명」 즉 적화통일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주한미군의 철수를 달성하기 위한 것

102) 「로동신문」, 1995. 6. 16 ; 11. 2 ; 12. 6.
103) 「로동신문」, 1995. 10. 12 ; 10. 15.
104) 「로동신문」, 1995. 10. 14 ; 11. 5 ; 1996. 1. 11.
105) 통일원, 「북한동향」 (서울 : 통일원, 1994. 4), pp. 116~117.
106) 북한은 군사정전위 무력화 차원에서 북한측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1994. 4. 28)시켰고, 중국군 대표도 완전철수(1994. 12. 15)시켰다. 그리고 중립국감독위 무력화차원에서는 먼저 체코 대표단을 철수(1993. 4)시켰고, 폴란드 대표단도 철수(1995. 2. 28)시켰다. 이로써 휴전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양대 기구인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는 사실상 마비되고 말았다.

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게는 이 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그것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 상황 가운데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하여 적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북한은 민족, 국가, 지역간 분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임과 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간섭 중지, 외국군대의 주둔과 기지설치 불허용, 지역적 군사구조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하였다.

셋째, 북한은 199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하여 '평화옹호운동'을 새로이 제창하였다.[107]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강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애호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제국주의 침략책동 저지와 핵무기 철폐 실현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 추구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생존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유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1994. 10. 21)에 대하여 김일성의 유훈을 관철한 커다란 성과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북·미기본합의문을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이며, 두나라 국가수반들이 보증한 무게있는 문건"으로 간주하였다. 북한으로서는 기본합의문 채택을 통해 중유공급과 경수로지원이라는 경제적 실리, 연락사무소 개설합의라는 외교적 성과 그리고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의 공식적 확약이라는 안보위기 극복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 다. 친선 : 국제주의적 원칙과 혁명적 의리 강조

김정일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라는 담화를 통하여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당, 국가 관계에서나 친

107) "평화옹호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절박한 현실적 요구," 「로동신문」, 1996. 1. 12.

선적인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과의 관계에서 일관하게 국제주의적 원칙[108]과 혁명적의리를 지켰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김정일의 언명에 기초하여 대중·러 및 대 제3세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한·중 수교와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대중 방문 및 초청외교를 지속함으로써 중국과의 친선·동맹관계를 밀접하게 유지코자 노력하고 있다. 1995년 7월 11일「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체결 34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은 전통적인 친선·협력관계 증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10월 25일 중국의 군대의 한국전 참전 기념「로동신문」사설을 통해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하였다.[109]

둘째, 북한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북한벌목공의 한국·인도 한국전쟁관련 문서 공개·북한 핵문제 등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었으나, 김일성 사망과 관련하여 7월 10일 옐친 대통령의 조의표명과 9월 파노프 외무차관의 방북 이후 대러시아 경협의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구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국가와 외교 및 경제협력 협정을 통해 관계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김일성 사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초청, 방문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이들과의 관계긴밀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1995년 신년사에서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천명함으로써 이들 동남아국가들을 중심으로 경협을 강화하려는 대외정책 방향을 강조하였다.

---

108) 북한은 국제주의적 원칙을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이 사회계급적 해방과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이룩하고 수호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서로 지지성원하고 친선단결하며 련대하고 협조하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주의적 원칙과 혁명적의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로동신문」, 1996. 1. 18.

109) "조중친선은 영원불멸이다,"「로동신문」, 1995. 10. 25.

# Ⅳ. 결 론

첫째,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은 크게 볼 때, 냉전기 공산주의 진영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으로부터 탈냉전기 북한체제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평화·친선」으로 발전해 왔다.[110]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북한은 대외정책 원칙과 이념으로 1940년대 후반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맹아인 공산국가들과의 친선강화와 자주의 맹아인 반제국주의를, 1950년대 초반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1950년대 중반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자주·친선·평화」의 맹아인 '주체적 입장' 다변외교 평화공존적 입장을, 1960년대 초반부터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자주성을, 1960년대 중반부터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반대국주의 반지배주의 및 비동맹주의에 기초한 자주노선을, 1980년부터는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및 자주·친선·평화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주·평화·친선을, 1990년대부터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개정헌법(1992. 4)에서 삭제하고 주체사상과 자주·평화·친선만을 강조하였다. 물론 북한이 대외정책 이념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의 '자주·친선·평화'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맹아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한 대외정책 이념의 변화는 국제 및 국내환경(3대혁명역량)의 변화 및 조선로동당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강조되었다.

북한은 1940년대 후반 비록 국제정세는 냉전고착화 추세로 인해 유리한

110)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원인을 이같은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 형성과 적응과정에 의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면에 있었으나, 대내적으로는 모든 민주적 정당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당규약이나 헌법에 맑스-레닌주의를 공식이데올로기 규정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대외정책 이념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노골적으로 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과정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조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게 되자, 1956년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으며, 이 시기 전후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의 평화공존노선과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1961년 제4차 당대회부터 맑스-레닌주의와 더불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더불어 자주노선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북한은 1967년 유일사상체계의 정립을 통해 김일성 유일체제를 확립하고, 1969년 미·소 데탕트 상황이 전개되자, 대내적 자신감을 토대로 한 대외 적응과정에서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고, 그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비동맹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72년 신헌법에서 이 두개의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사상체계로 통합하였으며,[111] 1974년 김정일의 공식적·비공개적 후계자 추대로 인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체제를 구축하게 되자,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만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고, '자주·친선·평화'를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1980년대말 이후 사회주의진영의 해체와 소련의 붕괴 그리고 걸프전을 목격한 북한은 체제수호적 관점에서 평화와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는 바, 대외정책 이념의 순서를 '자주·평화·친선'을 수정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2년 개정헌법에서 맑스-레닌주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외관계 기본원칙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도 제거하였다. 북한은 대외정책 기본이념과 대외활동 원칙으로 '자주·평화·친선'만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111) "북한헌법 제4조," 「북한개요」 (서울 : 통일원, 1991), p. 483.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자주'이념을 1950년대 냉전기에는 반제국의적 입장에서 사용하였고, 1960년대 중·소 분쟁기에는 사회주의 진영내에서의 자주성 확보입장에서,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탈냉전기에는 평화적 이행전략에 대한 체제수호적 입장에서 사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정부수립 직후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표현하는 반제국주의를 표명함으로써 '반자본주의 지향적' 자주이념의 맹아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김일성 정권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사상사업에서의 주체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주의 진영내의 등거리지향적' 자주이념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1960년대 초반 이후 중·소분쟁이 더욱 격화되어 중국과 소련간의 대북 견인경쟁이 심화되자, 사회주의진영내에서의 자주성확보를 위해 반대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교조주의 비판을 통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의미하는 자주이념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중국의 월남침공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을 목도하고, 이를 지배주의로 비판하는 한편 반제 자주역량과의 단결강화적 자주이념을 더욱 강조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진영의 동요와 해체를 목도하고서는, 자본주의 진영의 대사회주의정책을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대적 관점에서 반제적(체제수호적) 자주이념을 대외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북한은 반제적 자주이념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는 동시에 탈냉전기 국제질서를 자주·민주적 국제질서로 수립하기 위하여 유엔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넷째, 북한은 '친선'이념의 의미 또한 195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1960~70년대 쁠럭불가담 나라 그리고 1980~90년대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에로까지 확대시켜 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당적 관계 및 국가적 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계까지 '혁명적 의리' 라는 용어하에 친선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외교적 어려움을 노정하였다.

북한은 정부수립 직후 시기인 초기에는 친선의 의미를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로 규정함으로써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및 관계강화에 주력하였다. 한편 1955년 다변외교 모색과 1966년 자주외교 선포 이후 북한은 '쁠럭 불가담 나라'들과의 관계강화를 '친선'의 범주에 포함하여 1970년대에 수교증진의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우호적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의사를 천명하고, 1980년대 초반에는 조건부 대미 관계개선 의사까지도 천명함으로써 '친선'의 범주를 대대적으로 넓혔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본주의 나라와의 경제·기술적 협조 및 문화적 교류 발전과 민간간 친선관계 발전을 적극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자본주의국가와의 친선관계 증진은 진영외교 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북한외교의 기본적 입장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 남남협조를 다시 강조하였으나, 이 또한 별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당적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주의적 원칙과 개인간의 친분적 관계를 규율하는 혁명적 의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외관계의 현실적 한계와 절박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북한은 평화의 이념을 체제수호와 공산화통일을 위한 명분확보 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평화의 이념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체제유지의 안전판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산화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 정권이 평화공존 노선을 강조하자,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와 1961년 9월 제 4차 당대회를 통하여 전쟁불가피론을 수정하고 평화공존 정책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군사쁠럭 해체·군사기지 철폐·외국군대 철수·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 확대를 평화 이념의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분단 이후 북한이 추진해 온 '조국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88년 이후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 추세가 완만히 확산되기 시작하자, 대외 평화와 대남 공존의 입

장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 정권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김정일 정권은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지속할 것이다.

첫째, 대사회주의 및 제3세계(쁠럭불가담 나라)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자주 및 친선'의 이념하에 연대성 강화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견결한 반제자주적 입장" 그리고 "사회주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비록 사회주의진영이 축소되고 '쁠럭불가담' 나라들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지라도 이들과의 정치·외교적 연대는 생존전략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 '제국주의'(자본주의)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평화'의 이념하에 평화공세를 전개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에 매달려 있는 조건에서 평화옹호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국가와의 대결에 대한 한계와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탈냉전기 '유일초강국'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개선 속도와 폭을 자신이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지속하되, 대외정책의 구체적 방향으로서 '자주'이념하에 사회주의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발전 및 남남협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평화'이념하에 평화애호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핵군축의 실현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저지 등을 주장하고 또한 '친선'이념하에 대 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와 장기적 지속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